

KIPEC BRIEFS

미국의회 주요동향



목차

1. 의회 일정 및 소식	2
2. 연방의회 주요 입법 동향	4
3. 첨단 인공지능 관리체계와 행정명령 제14409호 (CRS 리포트 요지)·	6

7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음영 표시 : 의회 회의

□ 7월 미국 의회·정치 주요 소식

미 상원, 연방정부 섯다운 방지를 위한 임시예산안 협상 진전

미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은 연방정부 섯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정부 운영 예산을 2026년 12월 4일까지 연장하는 계속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 CR)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존 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상원이 8월 휴회에 들어가기 전인 다음 주 중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민주당도 주요 쟁점이 해결될 경우 임시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이 추진 중인 연방 보조금 집행 규칙이다. 이 규칙은 의회가 이미 승인한 연방 보조금이라도 정치적 임명직 인사가 최종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수전 콜린스 상원 세출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지도부는 행정부가 의회의 예산 결정에 개입할 수 있게 되어 의회의 예산 통제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를 제한하는 조항을 임시예산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행정부가 회계연도 종료 직전에 예산

취소를 요청해 의회가 이를 충분히 심의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포켓 예산취소(pocket rescission)'를 제한하는 조항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측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러한 제한에 반대하고 있어, 백악관의 예산 집행 권한과 의회의 재정 통제권을 둘러싼 이견이 임시예산안 협상의 최종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상원, 제이 클레이턴 국가정보국장(DNI) 인준

미국 상원은 7월 28일(현지시간)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제이 클레이턴(Jay Clayton)의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NI)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클레이턴 국장은 지난 6월 톨시 개버드(Tulsi Gabbard) 전 국장의 사임 이후 공석이었던 국가정보국장에 취임해 미국의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게 되었다.

60세인 클레이턴 국장은 뉴욕 남부연방검찰청 검사장을 맡아왔으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지냈다. 또한 글로벌 로펌 설리번 앤 크롬웰(Sullivan & Cromwell)에서 기업 인수·합병과 자본조달 분야를 담당한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클레이턴은 국가정보국장으로서 놀라운 성과를 거둘 것"이라며 그의 인준을 환영했다.

반면 민주당은 클레이턴 국장의 정보 분야 경험 부족을 주요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그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2020년 대선 결과와 관련한 질의에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인증되었다(certified)"는 취지로 답변하면서도 선거 결과를 명확히 인정하지 않아,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여부를 둘러싸고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검증을 받았다. 마크 워너(Mark Warner)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클레이턴 국장에 대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스럽다"고 평가한 반면, 공화당은 그의 검사 경력을 높이 평가하며 정보기관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옹호했다.

클레이턴 국장은 최근 대규모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이 진행 중인 국가정보국을 이끌게 된다. 빌 풀트(Bill Pulte) 국가정보국장 권한대행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인력 감축을 실시했으며, 국가정보국 직원 수는 수개월 전보다 약 30%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국장실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정보기관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2004년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 IRTPA)에 따라 신설된 조직이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주요 국가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앙정보국(CIA)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국가정보국장실의 정책 조정 기능과 위상이 이전보다 축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클레이턴 국장이 정보공동체의 조정 역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조직의 안정성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향후 주요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 故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추모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는 7월 2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 원형홀과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지난 7월 11일 대동맥 박리로 별세한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을 추모하는 추도식을 개최하였다. 추도식에는 J.D. 밴스 부통령, 존 톰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고인의 정치적 업적을 기렸다.

그레이엄 의원은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연방 하원의원을, 2003년부터 2026년까지 약 23년간 연방 상원의원을 지내며 공화당을 대표하는 외교·안보 및 국방정책 전문가로 활동했다. 그는 상원 군사위원회, 법사위원회, 세출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국방, 사법, 예산 및 대외정책 분야의 입법과 정책 논의를 주도했으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미국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당파를 초월한 협력과 협상을 통해 민주·공화 양당으로부터 폭넓은 신뢰를 받은 중진 의원으로 평가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그레이엄 의원을 "미 상원의 거목(a giant of the United States Senate)"이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위대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하며,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 당시 경쟁 관계에서 시작된 인연이 오랜 정치적 동맹과 우정으로 발전했다고 회고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2018년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인준 과정에서 그레이엄 의원이 보여준 강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으며, 존 톰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 역시 그의 초당적 협력 정신과 인간적인 면모를 기리며 미국 정치에 남긴 공헌을 높이 평가했다.

연방의회 주요 입법 동향

법률(안)	심의현황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21세기 주택공급 확대법 (H.R.6644)	공포 (2026. 7. 11.)	French Hill (공-아칸소) (2025. 12. 11)	미국의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개선을 목표로 주택 건설 촉진, 주택금융 접근성 제고, 지역사회 금융 활성화 등을 규정한 종합 입법임. 아울러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방준비제도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FY2027 국방수권법안 (NDAA) (H.R.8800)	하원통과 (2026. 7. 22.)	Mike Rogers (공-알라바마) (2026. 5. 13.)	미 하원은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NDAA를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가결함. 법안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데 2026-2027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됨. 또한 같은 날 하원은 NDAA와는 별도로 이란 전쟁으로 발생한 재정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국방부 지원 등을 포함한 9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조정 패키지도 함께 통과시킴.
북한 불법활동 대응 법안 (H.R.9963)	발의	Young Kim (공-캘리포니아) (2026. 7. 27.)	미 국무장관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협력하여 북한의 특정 불법 활동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최첨단 인공지능 연방 감독체계 법안 (H.R.9925)	발의	Jay Obernolte (공-캘리포니아) (2026. 7. 23.)	주(州) 간 및 국제 상거래에서 개발·배치되는 최첨단 인공지능에 대한 연방정부의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임.
경제적 차별 행위자 입국 제한법안 (H.R.9834)	발의	Michael Baumgartner (공-워싱턴) (2026. 7. 22.)	외국 정부 공무원이 미국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규제·행정조치를 시행한 경우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체류 중인 경우 추방할 수 있도록 「이민 및 국적법」을 개정하는 법안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해외 정부의 차별적 경제조치에 대해 이민 제재를 부과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미국 국경안보 강화 법안 (H.R.9773)	발의	Chip Roy (공-텍사스) (2026. 7. 20.)	2023년 하원을 통과했으나 최종 입법되지 못한 「Secure the Border Act(H.R.2)」의 주요 내용을 계승·확대한 법안으로, 망명제도와 이민가석방제도를 개편하고 불법 입국 및 비자 초과체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미국의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임.
-----------------------------	----	---------------------------------------	---

(CRS 리포트 요지)

개요

2026년 6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인공지능(AI) 혁신 및 안보 촉진(Promoting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Innovation and Security)」 행정명령 제14409호(E.O. 14409)에 서명하였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정부의 정보시스템을 AI 기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AI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조치이다. 이는 AI와 사이버보안을 다루는 일련의 행정명령 가운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조치이다.

행정명령은 AI를 미국의 전략적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인 동시에 새로운 사이버 위협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와 민간 부문의 정보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미국의 지식재산을 경쟁국의 악용으로부터 보호하며, AI 기반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1. 행정명령 주요 내용

행정명령은 AI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가 사이버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연방기관들은 첨단 AI 모델이 방어 및 공격 목적의 사이버 작전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공동으로 평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지시받았다.

또한 AI 시스템의 사이버 역량을 기준으로 국가안보상 관리가 필요한 '적용 대상 프런티어 모델(Covered Frontier Model)'을 지정하기 위한 기밀 평가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2026년 8월 1일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첨단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에는 새로운 AI 시스템을 핵심 인프라 기업 등 신뢰할 수 있는 외부 기관에 제공하기 전에 정부가 최대 30일간 해당 시스템을 검토할 수 있는 자발적 심사 절차에 참여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를 통해 AI 시스템의 잠재적인 보안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AI 관련 취약점과 사이버 위협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AI 사이버보안 정보공유센터(AI Cybersecurity Clearinghouse)를 설치하고, 첨단 AI 기술을 활용하여 연방정부의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현대화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또한 AI 정책을 경제안보와 국가경쟁력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하면서 미국의 지식재산 보호와 AI 분야의 기술 우위 유지를 핵심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2. 부처별 주요 이행 과제

행정명령은 관계기관별로 구체적인 이행 과제와 추진 시한을 제시하였다.

주요 과제로는 ▲국가안보시스템 및 국방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보안 강화 ▲민간 연방시스템에 대한 구속적 운영지침(Binding Operational Directive) 발령 ▲주·지방정부와 핵심 인프라에 대한 AI 기반 사이버보안 도구 확대 ▲AI 사이버보안 정보공유센터 설치 ▲AI 취약점 탐지 연구개발 지원 ▲적용 대상 프런티어 모델 평가를 위한 기밀 벤치마킹 체

계 구축 ▲AI 기업의 자발적 정보공개 체계 마련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확충 ▲AI를 활용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우선 기소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과제는 2026년 7월 2일 또는 8월 1일까지 추진하도록 규정되었다.

3. 사이버보안 측면의 시사점

이번 행정명령은 첨단 AI 모델에 대한 국가안보 차원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면서도 정부의 허가제나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다. 대신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정부가 첨단 AI 모델의 잠재적 위험을 조기에 검토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특히 '적용 대상 프런티어 모델'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첨단 AI 모델을 국가안보 관점에서 관리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첨단 AI를 민간뿐 아니라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한 기술로 보고, 초기 단계부터 위험을 점검하려는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AI 개발기업이 자발적 심사 절차에 참여할 경우 정부는 AI 모델이 공개되기 전에 사이버 공격 및 방어 활용 가능성과 잠재적 보안 위험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AI 시스템의 취약점과 악용 가능성을 보다 조기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주요 AI 기업이 참여하지 않거나 적용 대상 모델의 범위가 제한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검토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잠재적 위험을 모두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제시된다.

AI 사이버보안 정보공유센터를 중심으로 AI 관련 취약점과 위협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점도 주목된다. 이러한 정보공유 체계는 핵심 인프라의 사이버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지만, AI 모델 관련 정보와 사이버 위협 정보가 연방 정부 시스템에 집중될 경우 해당 시스템 자체가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4. AI 정책 전반에 대한 시사점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가 유지해 온 AI 거버넌스 기초를 대체로 계승하고 있다. AI 시스템에 대한 자발적 기준과 평가, 공공·민간 협력, 기존 연방기관의 권한 활용이라는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정책의 중심을 AI 안전(AI Safety)에서 AI 보안(AI Security)으로 보다 명확하게 이동시켰다는 점이 특징이다.

행정명령은 재무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국토안보부(DHS),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등이 협력하여 프런티어 AI 모델의 안전한 배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앞서 NIST가 앤트로픽(Anthropic)과 오픈AI(OpenAI)의 주요 AI 모델을 공개 전후로 평가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한 사례를 제시하면서도, 해당 협약이 모든 프런티어 AI 기업을 포함하지 않았고 평가 결과의 공개도 의무화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함께 지적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의회에서는 AI 모델의 사전 안전성 평가와 투명성 기준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5.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 (NSPM-11)

2026년 6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 제11호(NSPM-11)를 발표하였다. 이 각서는 국가안보 분야에서 AI의 개발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침으로, 국가안보 관계기관이 산업계와 협력하여 첨단 프런티어 AI 모델을 국가안보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입되는 AI 시스템이 신뢰성, 견고성, 통제 가능성을 갖추고 관련 법률과 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6. 미국 의회의 고려사항

향후 의회에서는 행정명령의 이행 기반과 규제 방식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적용 대상 프런티어 모델'의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AI 사이버보안 정보공유센터 설치와 주·지방정부 지원 확대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방안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AI 벤치마킹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 규모,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 역시 향후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둘째,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한 현행 접근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수준 이상의 AI 모델에 대해 출시 이전 시험과 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제체계를 도입할 것인지가 주요 정책 쟁점으로 제시된다. 아울러 자발적 평가체계가 국가안보상 위험을 관리하는 데 충분한 실효성을 갖는지, 보다 강력한 감독체계가 필요한지 여부도 향후 의회의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F13268?s=2&r=129>

*본 보고서는 2026년 7월 9일 CRS가 발간한 Controlling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Executive Order 14409 Explained(총 3 페이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발행일 2026년 7월 31일	발행처 한미의회교류센터
『KIPEC BRIEFS』는 한미의회교류센터가 고객을 대상으로 월 1회 발행하는 미국 의회 입법 및 현지 소식입니다.	

KIPEC is registered under FARA. This material is distributed by the Korea Inter-Parliamentary Exchange Center (KIPEC) on behalf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dditional information is on file with the Department of Justice, Washington, D.C.